

“경매가 빠고 다 올랐다”...시설하우스 겨울나기 3중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난방용 등유값 거듭 상승세
 인건비·비료값도 고공행진에 “억대 지출” 하소연
 등유값 아끼고자 설비 변경 고심...“남는 게 없어”

“(수확품) 공판장 경매가격 빠고 다 올랐어
 요. 이젠 못 버팁니다.”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도동의 가지 재배

시설하우스 내부온도 25도를 유지중인 이 곳
 에서는 얼마 전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듯 등유
 냄새가 곳곳에서 스쳤다.



광양항서 총파업·총력 투쟁 결의하는 민주노총

6일 오후 전남 광양항 허치슨포트광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외치며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사계절 내내 가치를 재배하고 있는 이곳에선 지난달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지 재배를 위해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료인 등유 가격이 이달 기준 0당 1450원대로 고공 행진 중이지만 수익과 직결된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난방을 멈출 수 없어서다.

이날도 전날 쓴 만큼 등유를 채우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온 유류차량이 하우스 외부에 마련된 유류탱크에 주유기를 꽂고 있었다. 주인 심효섭(34)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오늘대로 오른 (농사) 부대비용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7년 농업에 뛰어든 청년농업인 심씨는 그해 겨울 등유 값을 푹푹히 기억하고 있었다. 0당 700원 대.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오르면 등유 가격이 지난해 1100원대를 찍더니 내년에는 1500원대를 넘볼 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유류 가격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사계절 작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 오른 등유값에 대한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필수불가결한 난방 탓에 지난해에는 유류비로만 4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써야만 했다. 올해는 5000만 원을 부쩍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건비와 노동력 수급도 만만찮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고용, 각각 230만 원씩의 월급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20만원이나 오른 데다 수급도 제때 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비료값도 폭등했다. 지난해 25kg 일반 기준 3만 원 대에 머물던 비료 한 포대는 올해 7만~8만 원 대로 크게 올랐다.

당장 급한 등유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전기 온풍기로 난방시설을 바꿀 생각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큰 탓에 시설 도입은 더디기만 하다. 3000여㎡ 시설하우스 한 동마다 12kW 규격의 전기온풍기를 6개씩, 총 24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전기 수압 허가, 설치까지 포함할 경우 일추 8000여 만 원이 든다.

심씨는 “8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추후 전기료와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큰 비용인 탓에 설비 완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폭등한 유류 가격이 등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에 등유를 써야 한다.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고 토로했다.

주변 시설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중인 김창섭(41)씨도 올상이다. 부대비용은 날로 치솟는데 공판장 경매가격은 속절없이 폭락해 본전

도 건지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딸기 출하 시점을 맞추기 위해 등유 1100여를 써 난방기를 가동시킨 그는 이달에는 5000를 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씨 또한 치솟는 등유값 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전기로 가동하는 온수난방설비 지원금을 농어촌공사가 일정 부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농민들이 많아 선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하필 딸기 작황도 지난해 대비 좋은 탓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가격선이 무너지는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상황에서 공판장 경매가격이 1kg당 1만8000원~1만9000원은 나와야 하는데, 올해는 1만5000원 선에서 책정됐다”며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 시설하우스 개수 비용 등 값야 할 빛이 억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등유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면 지자체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며 “바로 인접한 전남도에서는 등유가격을 0당 140원씩 지원해준다는데 광주는 비슷한 정책마저 없다. 광주농민은 농민이 아니냐”고 지원을 호소했다.

임택기 기자

말로만 서민 버팀목?...광주시, 공공요금 인상 ‘들썉’

내년 택시요금·공영주차장 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내년도 광주 지역 공공요금 들썉이고 있다. 고그리·고물가에 그 어느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지배적 전망 속 안정적 서민 삶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범위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인상 시기는 이르르면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2019년 1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기본요금 3300원(주간 기준·심야는 20% 할증)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의 물가인상등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도 대폭 인상된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급지 기준, 시

간 당 요금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차요금 부과 기준도 변경한다. 현재는 기본 30분 요금에 15분마다 요금을 추가한다. 변경 뒤에는 기본 요금 최초 10분 이후 10분마다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광주시는 2004년 이후 18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동결해 온 만큼 이제는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인상을 결정했다.

2018년 이후 동결된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거쳐 하반기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매년 도시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내년 요금 인상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억제정책에 눌려 있던 각종 공공요금도 하나둘씩 들썉이면서 서민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구 동림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49)씨는 “월급 빠고 다 오르는 것 같다. 치솟는 물가가 무섭게 느껴 질 정도”라며 “공공요금 인상의 당위성은 알겠지만, 인상 시기만이라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배모(50)씨는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오니 이제는 금리와 물가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민생 최우선과 함께 위기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권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